

지속적인 탈탄소 이행 실현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지난 5월 지구대기 중 CO₂ 농도가 430PPM을 넘어섰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관장하는 태평양 하와이의 마우나로아(Mauna Loa)산의 측정소 기록이 430.2PPM, 전년보다 3.5PPM 상승했다.

또 다른 신기록이다. 현세대가 400PPM 이상의 대기를 호흡하는 최초의 인간이다. CO₂ 농도는 기후위기의 중요한 지표며 화석연료 연소 시 배출되는 부산물이다.

이들이 지구대기 중에서 담요와 같이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온실가스’라고 한다.

이들이 지구의 기후 패턴을 변화시켰고 지금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폭염이나 가뭄, 산불 그리고 홍수와 태풍 등 기상 이변의 범인이다.

지난 1958년 세계 최초로 대기 중 CO₂ 측정이 하와이의 마우나로아산 3346m 산정의 측정소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연중무휴로 측정되고 있다.

1958년 당시 기록은 313PPM이었다. 이후 인류가 달나라에 갔던 1969년 325, 유엔이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을 논

하기 시작한 1990년 전후에 350,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었던 2015년 400, 지난 5월에 430에 이르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했고 또한 상승 폭이 커졌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추세가 계속 되면 금세기 중엽, 500PPM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한다.

430PPM 지구의 오늘은 어떤 모습인가. 국내에서는 지금 한창 폭염과 대결 중이다. 본격적인 여름 6월 말부터 시작된 폭염이 7월까지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국에서 보내는 폭염특보 문자메시지가 하루에도 수차례다. 수은주가 35도를 넘어서고 한밤중에 열대야로 시민들의 고통스러운 여름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인류는 가장 많은 화석연료를 소비했고 가장 많은 CO₂를 대기에 배출했다. 2015년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었고 이후 ‘2050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 교통 수송에서 전기차 보급도 괄목할 만큼 증가가 있었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아직 화석에너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금년 혹은 내년 화석연료 배출량이 배출 정점(Peak)을 찍고 하강 곡선을 그려야 하지만 확실한 징후가 아직 없다.

최근 중국의 폭발적인 재생에너지 도

입과 전기차 보급 등으로 배출 정점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더 지켜봐야 한다.

430PPM은 인류사회에 어두운 이정표이다. 마우나로아 측정소를 관리 운영하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스크립스 해양연구소(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의 랄프 킬링(Ralph Keeling) 박사는 430PPM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다른 기록적인 수치’라고 말하며 ‘정말 슬픈 일이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점점 더 미지의 영역으로 거의 확실히 매우 위험한 영역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했다. 430PPM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 인류의 엄청난 고통과 미래 세대의 예고된 불행의 상징이다.

대기 중 CO₂ 농도를 떨어뜨려야 한다. 지구의 평균기온도 상승을 멈출 것이다.

사실 인류는 이미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이행하면 되는 일인데 행동이 더디다. 전 NASA(미국항공우주국)의 저명한 기후학자 제임스한센(James Hansen) 박사는 ‘인류의 안전과 평화, 문명을 유지하려면 대기 중 CO₂ 농도를 350PPM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구 모든 나라들, 특히 고탄소 선진국들의 야심차고 지속적인 탈탄소 기후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社說

전남 행정통합 논의, 더는 늦출 수 없다

결단 필요한 정치적 리더십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라남도 내 통합 논의는 수년째 정체돼 있다. 전북 완주와 전주가 찬반 논란 속에서도 통합 특례시 추진을 공식화하고 공론화를 이어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수·순천·광양은 산업과 생활권을 공유하며 오랜 기간 통합 논의를 이어왔지만, 정치적 입장 차와 주민 여론의 간극으로 매번 무산됐다. 최근에는 ‘경제동맹’을 통해 공동선언까지 나아갔지만,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은 없다. 순천이 적극적으로 통합 필요성을 외치는 반면, 여수와 광양은 ‘3려통합’의 후유증과 행정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명분과 기대효과만 앞설 뿐, 통합을 실현할 동력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셈이다. 목포·신안은 더 앞서갔다. 통합 효과 분석 용역을 바탕으로 행정·경제·복지 등 24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2026년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단체장 동시 낙마로 추진 동력이 사라졌고, 현재는 민간 논의만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통합에 대한 시·군 간 온도차도 여전하다. 신뢰와 이익이 불분명하다는 일부 주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청주시와 청원군, 창원·마산·진해 통합 사례는 지역의 외형적 성장과 도시 위상 제고를 이끌어냈다. 완주·전주는 갈등이 있지만, 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와 특례시라는 목표 아래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통합 이후 공공투자 확대,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 등 구체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확실한 동기와 책임 있는 행정이 결합하면 통합은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전략임을 증명할 셈이다.

전남은 언제까지 논의만 반복할 것인가. 통합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 전략이다. 전남이 제도적 통합에서 계속 뒤쳐진다면,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주민 공감대 형성과 현실성 있는 로드맵, 정치 리더십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늦을수록 기회는 사라진다.

뜨거워진 광주, 모두의 자업자득 아닌가

녹지 등 특단의 대책 고민해야

최근 3년 새 광주의 도심과 외곽 지역에서 열 환경 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도시는 기후위기의 주변이면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공간이다. 더 늦어지기 전에 기후환경 지표를 예전으로 되돌리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7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에 따르면 2022~2024년 여름철 광주의 지표면 온도와 습도, 체감온도, 열 지수 등 열 환경 지표가 2019~2021년 보다 모두 상승했다. 도심 지역의 지표면 온도는 2019~2021년 평균 36~37도에서 2022~2024년에는 38도 이상으로 상승했고, 체감온도 역시 평균 35~36도에서 최고 38도까지 올라갔다. 특히 도심 중심부인 상업·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지역이 외곽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관찰됐다. 수십 년간 진행된 도시화와 난개발로 녹지가 줄고, 인공 포장 면적이 늘어나 열 축적과 방출이 더 어

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여름 폭염의 대명사가 된 ‘광프리카’(광주+아프리카)라는 용어는 어쩌면 광주의 자업자득이다. 도심의 열섬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녹지와 산림이 많은 외곽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바람길을 막는 등 인위적 방식의 개발이 이뤄졌다는 반증이다. 당장 최근 20여 년간 광주의 공원 면적은 1930여만㎡에 묶여있지만 같은 시기 도시개발은 눈에 띄게 넓어졌고 건물 밀도와 포장 면적도 높아졌다. 도심과 외곽 간 열환경 지표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것도 도시화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도시의 기온이 높아지는 것은 광주의 경쟁력 뿐 아니라 지역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광주시는 급속히 빨라지는 열 환경 지표를 타개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도로나 가로변 등에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정책도 고민해야 한다. 인간의 체온보다 높은 38도의 찜통더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지금, 한 시가 급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를 중국에만 부과하고,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공식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일 USTR에 제출했다. 사진은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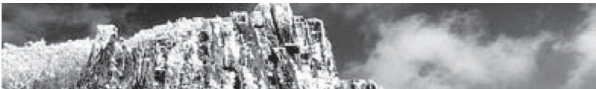
서석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미와 실용성을 담아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에 제작될 대통령 기념 시계는 대통령의 이름과 봉황 문양 등이 새겨진 손목시계로, 대통령이 공식 행사나 특별한 자리에서 귀빈, 공로자, 관계자 등에 선물로 증정하는 비매품이다. 다른 기념품에 비해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실용적인 아이টে

머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대통령 기념 시계는 봉황 문양과 서명이 담겨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특정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기념하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념품으로, 초기에 포상 개념으로 시작되었으며, 고급 품목이었던 시계를 통해 대통령의 애장품으로 여겨졌다.

한국에서 최초의 대통령 기념 시계는 1970년대 초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졌다. 당시 시계는 고급 물품으



로,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하는 방식으로 선보였다. 이 시계는 봉황·무궁화 문양과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새겨져 있었으며, 당시에는 시계 가격이 비쌌고 제작량도 소량이었기에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대통령 기념 시계는 외국에서는 흔하지 않으며, 대부분 취임 기념 메달이나 동전 등이 제작된다. 그러나 대통령 기념 시계는 비매품이기 때문에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 시계는 취임 초기 20만원대에 거래되었으나, 12·3 계엄사태 이후 5·6만원대로 떨어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는 사후 유족 기부 명목으로 18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런 거래 현상은 시계가 그 대통령과 관련된 역사적 가치와 민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 시계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치 있는 아이টে

머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 정치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유용한 기념품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의미를 갖고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